

북한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현황과 개선 과제

강 일 규*

- I. 문제 제기
- II. 북한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특성
- III.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인프라 현황 분석
- IV. 개선 과제와 협력 방안
- V. 결 론

요 약

현재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발전은 당장 충분한 산업인력이 필요하나 북한은 인력의 기술·기능 수준과 노동생산성 및 작업 몰입도의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한 근로자들에게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정책적 기저와 인프라를 보면, 정책적 기저는 김일성의 지시와 노동당의 당 방침에 따르며, 특히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직업교육훈련에도 적용되어 기본 방침으로 강조되고 있다. 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선 시급한 개선 과제는 교육훈련 기관의 시설과 장비 보강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어떤 형태이든 우리측의 다양한 지원·협력이 필요하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들 시설 장비가 지원된다면, 직업기술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실질적인 직업능력이 향상되고, 이들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되는 등의 효과와 남북경협 활성화 등 북한지역 경제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지원·협력은 북한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요인별·단계별·대상별·지역별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북한지역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I. 문제 제기

현재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국내외의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체제 문제 및 에너지·식량문제 등등 여러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얹혀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해결 방안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복잡한 해결 방안 중에서 경제회복 방안의 하나는 국내외의 경험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산업발전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즉 성장 동력으로 산업육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회복에서 중요한 산업발전은 당장 충분한 산업인력이 필요하다. 그러테 산업인력은 단기간에 양성·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경제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산업발전에 있었고, 산업발전은 충분한 인력 양성과 공급에 기인하였다. 북한 지역의 경제 회복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과 적절한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양질의 북한 인력¹⁾은 바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북한 경제 회복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 모두 부촌

1) 참고로 ILO의 북한 인구 추계를 보면, 북한의 총인구는 2000년 21,862천 명에서 2006년 22,583천명으로 6년간 721천 명(0.96%)의 인구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2000년 16,060천명에서 2006년 17,040천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2000년 10,323천명에서 2006년 10,775천 명으로 452천 명(0.96%)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구는 10-24세, 35-49세,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증가한 반면, 0-10세, 25-34세, 50-54세의 연령대에서 뚜렷한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24세의 연령대는 2000년 5,232천 명에서 2006년 5,664천 명으로 432천 명이 증가되었으며, 같은 기간 35-49세 연령대는 2000년 4,060천 명에서 2006년 5,329천 명으로 1,269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주요 동력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데는 이혼의 여지가 없다. 이점은 앞으로도 남북한 모두에 해당되는 우리의 현실이며, 특히 지식기반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북한 인력의 기능·기술 수준과 노동생산성 및 작업 몰입도의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강일규, 2000). 특히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시설 및 기자재 등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관계자는 대북 투자와 사업 협력을 위해서 먼저 기술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언론도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낮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 생산 원가를 100으로 할 때 61.6 정도로 낮지만, 평균 생산성은 국내 동종 업종 대비 53.7%에 그치고 있다(중앙일보, 2007. 10. 8)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북한지역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협력²⁾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제기하면서 북한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 혹은 수단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에 있다고 보고, 현재 북한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났다. 60세 이상의 연령대도 2000년 2,106천 명에서 2006년 2,595천 명으로 489천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http://laborsta.ilo.org/>(EAPFP-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1980-2020), 통계청 KOSIS.

- 2) 그 동안 북한에 대한 협력 실태를 보면, 사실 1995년에 시작된 대북한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 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대북한 지원도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원주체들의 참여와 협력관계 형성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대북한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에서 출발하였는데, 초창기에는 식량과 의약품·의류 등을 지원하는 제한된 단순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대북한 지원에서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 식량과 비료를 매년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의 대북지원 규모도 점차 증가하면서 2004년에는 처음으로 지원규모가 1천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에 국제사회 지원액은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였고, 2005년 9월에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과 북한 상주 사무소의 폐쇄 또는 상주 인력의 축소를 요구하면서 유엔과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해결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본적인 정책 기저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특성

산업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서 주요한 수단은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방향은 김일성의 지시와 노동당의 당 방침에 따르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직업교육훈련에도 적용되어 기본 방침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일규, 2000).

1. 기술인재 양성에 관한 당의 방침

북한도 산업발전을 중시하여 인력양성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일찍부터 기술교육을 강조하여 기술자와 기능공 양성을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다. 특히 기술교육에서 주체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강조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체의 힘으로 주체형의 혁명적 기술인재를 키우는 것인데, 기술교육에서조차 이데올로기³⁾를 강조하는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직업교육에 있어 공산주의 사상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부르짖고 있다.

우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체철학의 근본원리⁴⁾를 기술인재 양성사업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를 기술인재 양성 사업에 적용하면서, 이를 독창적·혁명적인 방침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교육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은 무시되고, 오직 당의 결정과 영향력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허울 좋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3) 북한의 이데올로기(Ideology)는 마르크스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개념인 상부구조와 기본 토대의 관계에서 정치나 과학·도덕·법·철학·문학·예술 등의 관념적이고 가치관적인 상부구조의 모든 형태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유물변증법·유물사관·국제공산주의·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론·유토피아 국가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교육학에서는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이론들이 발달되어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이데올로기가 가장 우선시 되는 실정이다(김동규, 1990).

4)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이란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철학사전, 1970).

수 있다.

한편 교육체계⁵⁾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형태(김면희, 1996)의 교육체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에서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76)”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은 공장대학·공장고등기술학교·공장고등전문학교를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교육과 야간교육(리종찬, 1996)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일성은 “로동자와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통신교육과 야간교육망을 더욱 늘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2권, 218)”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통신 시설과 장비가 열악한 상황⁶⁾으로 인하여 교육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짐작

된다.

또 하나의 방침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⁷⁾를 철저히 구현하여 기술인재 양성 사업에서 기술교육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교육체계 전반에 걸쳐 사상과 과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정치사상교양과 과학기술교육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도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직생활을 통한 사상교양과 사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직업교육이라는 본래의 목표보다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김일성 우상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강조하는 방침은 직업교육훈련의 주체적인 추진이다. 즉 북한은 모든 직업기술교육을 주체적으로 실시하여 자력갱생과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는

5) 북한의 교육기관수는 2006년 기준으로 소학교 4,950개교, 중학교 4,827개교, 대학교 772개교이며, 각 교육기관별 학생 수는 각각 1,374천명, 2,394천명, 530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만 명 당 대학생 수로 환산하면 평균 229.6명이다. (통계청, KOSIS)

6) 남북한 TV수상기 생산 능력을 보면, 1985년 남한은 5,400천대이고 북한은 240천대로 22.5:1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심하여 1996년의 통계를 보면, 남한은 22,000천대이고 북한은 260천대로 84.6:1 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보아도 북한의 통신교육은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7) “사회주의교육학”이란 용어는 1968년 3월 14일 김일성이 ‘학생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라는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때 사회주의의 교육학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을……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화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교육학의 원리며 기본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원칙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교육에서 양성·노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전용선, 1993).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모든 정책이 당과 김일성의 지시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와 국제적인 교류를 동한시키는 비과학적·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방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지식 교육의 강화와 함께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능력 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키울 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21)”라고 주장하면서, 산지식과 집단노동을 강조하며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전체 근로자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대한 당의 방침

북한은 경제성장의 기초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는데, 김일성의 주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기술교육체계를 시급히 확립하여 일군들의 기술수준과 노동자들의 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창조성과 적극성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주장과 북

한의 정책적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근로자들의 기능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기술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즉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기초 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초 원리와 전기·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 인민경제의 현대적 생산과 결부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20)”라고 주장하면서 11년의 의무교육 기간 중에 일반 기초지식과 함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초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침의 내면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예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을 바로 생산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기능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조직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기술학습과 기능전습사업을 윗게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181)”라고 주

8)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모든 정책은 소위 ‘유언통치’를 통하여 생전 김일성이 주장하였던 바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중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장하면서 나뭇대로의 인력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장 및 기업의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각 업체의 계획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로 북한은 기술교육의 학습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기술기능학습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라는 당의 구호가 실생활에 옮겨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라고 주장하면서 기술기능 학습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습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네 번째로 기술기능학습의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헌과 다른 나라의 문헌도 많이 연구하고 최신기술을 배우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술기능전습사업의 기본목적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현대적인 기계 설비를 잘 다루어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학습 내용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근로단체⁹⁾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직맹조직들은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선노동당의 외곽조직을 활용하여 근로자를 통제하고,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자발적인 능력개발의 동기부여가 아닌 강제적·통제적인 정책을 쓰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앞세운 기술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사업방법은 혁명투쟁에서나 경제건설에서나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모든 분야는 정치적이테올로기를 강조하여 당의 방침과 김일성 개인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중단체들은 그동안 당의 외곽조직으로 공산당이 대중을 지도하는 데 핵심적인 활용수단이 되어 왔다. 일찍이 레닌은 이러한 대중단체들을 무산계급이 분산되어 있고, 농민들과 같이 비무산계급이 주요한 근로대중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천위대(공산당)와 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대중단체들에 대한 레닌적 인식은 오늘날 북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 대중단체들을 근로단체라고 부르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여성동맹)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북한에서 이 근로단체들은 북한의 유일 지배정당인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체들의 중요한 업무는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사상 교양이다. 이종석 편(1994),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를 참고.

3. 북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정책적 특성

이상의 북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주요 정책적 기저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적 이념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권력은 최고지도자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정책은 김정일의 지시와 당의 방침 및 노선에 따라 정책과정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체제도 당과 수령의 1당 독재체제와 수령 지배체제라고 볼 수 있다. 조직의 운영체제도 민주집중제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행정도 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비능률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력생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소

유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북한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로의욕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¹⁰⁾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의 경제력은 모든 부문에서 남한보다 훨씬 뒤져있고, 산업구조도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비스업이 부진하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2차 산업에서도 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식량사정도 어려워 경제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사회정책은 계급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계층도 출신성분에 따라 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 등으로 분류하여 사회안정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또한 직업별·소득별로도 계층이 분류되어 노동자 및 농민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계급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직업구조는 북한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1·2차 산업

10) 북한경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1.8%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대비 351달러가 증가된 1,10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차·3차 산업보다 높은 편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757달러에서 2006년 1,108달러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확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전체 GDP는 2000년 18,928억 원에서 2006년 21,216억 원으로 2,288억 원(0.9%)이 증가했으며, 경제활동별 GDP는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림어업은 2000년 5,750억 원에서 2005년 7,119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06년 6,931억 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북한에서 중요한 경제기반인 것으로 판단된다. 광공업은 2000년 4,814억 원에서 2006년 5,336억 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서비스업도 같은 기간 6,150억 원에서 6,405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GDP 규모는 2000년 16,714억 원(88.0%)에서 2006년 18,672억 원(88.0%)으로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laborsta.ilo.org/>(EAPFP-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1980-2020), 통계청 KOSIS.

종사자가 많아 인위적인 직업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기저에서 정책결정 측면을 보면, 북한의 모든 정책은 김일성 및 김정일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업교육훈련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되고, 당에 의해서 결정 및 추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책결정이 최고권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업기술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추진 측면을 보면, 북한의 직업기술교육정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 특징이다. 즉 정책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최고권력자의 지시만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독단적인 정책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책내용 측면을 보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북한의 직업기술교육정책은 가장 우선시 하는 내용이 정치사상과 김일성 주체사상교육의 강조이다. 이는 기술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먼저 강조하여 당과 김일성 부자에 충성하고 복종할 것을 강요하

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이 급진적이고 정책의 환경을 무시한 폐쇄성을 띤 정책내용이 대부분이다. 동시에 직업기술교육의 평등성과 집단성·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통한 반복교육의 강조 등이 정책내용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남북협력은 북한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양측의 정책에 익숙한 주민의 사고와 행태의 간격을 점진적으로 좁히고, 상호 이해·협조할 수 있는 통합형의 새로운 체제를 개발·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III.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인프라 현황 분석

북한은 주체적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기술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기관을 보면, 일반대학에서 실시하는 부분적 기술과목 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농장·어장대학,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학교,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공학교와 양성소 등이 있다.¹¹⁾ 이

11) 본 내용은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기관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 7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하나원을 수료한 사립과 하나원 교육생 등 총 50여명과 면담하여 그 중에서 유용한 18명의 면담결과를 반영하였다. 새터민과의

〈표〉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기관

| 구분 | 공장·농장·어장대학 | 기능공학교 | 양성소 |
|--------|--|---|--|
| 입학대상 | 공장, 농장, 어장 등에 다니는 노동자 등 | 고등중학교 졸업생, 제대군인 등 | 고등중 졸업생, 제대군인, 기업소 노동자 |
| 교육기간 | 5년 | 6월, 1년, 1년 6개월 | 6월, 1년, 1년 6개월 |
| 설치 | 대규모 노동자가 있는 공장, 국영농장, 어장 | 기능공양성이 필요한 물질기술조건을 가진 기업소, 공장, 광산, 농장 등 | 각 지역별 설치 |
| 종류 |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 광산기능 공학교, 림업기능 공학교 | 자동차 양성소, 교양원 양성소, 간호원양성소, 상업간부 양성소 |
| 졸업시 자격 | 대학졸업자격 | 급수부여 | 급수부여 |
| 수업방법 | 일하면서 야간, 통신과정 등에 의해서 수업 | 전일제과정으로 주로 오전에 이론 오후에 실습 | 전일제과정으로 주로 오전에 이론 오후에 실습 |
| 반구성 | 여러 과로 구성 | 여러 과정이나 반으로 구성 | 단일 전문 과정으로 구성 |
| 관리 | 행정 : 교육성 고등교육부 지도 경제 : 해당 공장, 기업소, 농장 | 관리 : 중앙노동행정부문 기업소 운영 : 공장, 탄광, 기업소 등이 운영 | 관리 : 중앙노동행정부문 운영 : 유관 상급기관 |
| 교원 | 대학교원 실무와 급수가 높은 사람 | 이론과목 : 대학졸업자 실습교육 : 실무경력 및 급수 높은 사람 | 이론과목 : 대학졸업자 실습교육 : 실무경력 및 급수 높은 사람 |

들 교육훈련 기관의 주요 인프라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기관 개요

북한은 직업고등교육체계를 확대한 결과 공장·농장·어장대학(김면희, 1996) 등이 설립되었다. 북한은 국가의 계획적인 조직 하에 공장·농장·어장 등의 일터에서 고등

교육을 받게 한 것이다. 공장·농장·어장 대학은 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되는 대학으로 기업소·농장·어장 등에 설립한 것이다.

기능공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고 기업소·광산·공장이나 지역에서 직업에 임직하기 전 단계에 기술을 배우는 교육기관¹²⁾으로 고등중학교 졸업생, 제대군인, 기업소 노동자 등에게 생산경험과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곳이다.

면담은 하나원의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새터민과 면담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므로 새터민 개개인이 북한에서의 경험 등에 의해 사실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힌다.(강일규 외, 2008)

12) 기업소나 공장에 재직하는 노동자들도 기능공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양성소는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단일과정 기술을 가르쳐 급수¹³⁾를 송급해 주는 직업기술교육기관이다.

이러한 북한의 직업기술교육기관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인프라 특성

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기관

우선 북한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북한은 직업고등교육체제를 확대한 결과 일반대학 외에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두고 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능공학교는 정규학교가 아니지만, 기업소·광산·공장 등이나 지역에서 직업에 임직하기 전 단계에 기술을 배우는 교육기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제대군인 및 기업소 노동자 등에게 생산경험과 전문기술을 교육한다. 양성소는 재직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단일과정 기술을 가르쳐 급수를 송급해 주는 직업기술교육기관이다.

이러한 체제는 일단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기본적인 학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 운영에서 입학 대상이

나 교육기간, 학교 설치 규정, 학교의 분류, 졸업 자격, 수업 방법, 교육 구별 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 시설과 장비 및 교원 등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관리되는냐가 중요한데, 조사 결과 교육기관의 운영·관리에 문제가 많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나. 학교의 일반 시설 및 장비

우선, 공장·농장·대학 등의 시설 및 장비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장대학은 공장과 구분되어 별도의 시설로 강의실·컴퓨터실·도서실·실습실 등이 있는데, 장비나 시설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대부분이고, 보통 별도의 운동장은 없다. 공장대학은 기업소를 살리기 위한 기술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수량이 적어 컴퓨터 실습을 사실상 못하는 실정이며,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로 실습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한다. 한편 농장대학은 농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전실 등 학습방을 이용해 이론수업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은 직접 농장에서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장·농장대학들의 시설이 대단히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책과 교재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13) 북한의 노동자들은 당간부, 행정관리일꾼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급수제도를 통해 대우가 차등화 된다. 즉 일정한 근무 연한이 되면 정기 급수시험을 거쳐 송급이 가능하며 급수에 따라 급료 등 대우가 달라진다.

교원들이 활용할 노트도 없을 정도이다. 또한 교과서는 물론 학습장·필기도구 등도 형편없어서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공장대학이나 농장대학의 시설 자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중요한 장비인 기계 등의 부족을 오히려 뜯어 팔아먹었기 때문에 시설이나 장비가 형편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책이나 필기구 등은 거의 모두 장마당에서 구입하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기능학교나 양성소의 시설 및 장비를 보면, 다른 학교와 별 차이 없이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공학교의 시설은 전공 별로 다르지만, 교실·기계·장비 등은 갖추고 있다. 예컨대 무산광산기능공학교 시설은 전기를 사용하는 굴착기가 있고, 실습은 무산광산 현장에 올라가 2명씩 한개 굴착기에서 광산 노동자와 같이 실습을 한다. 림업기능공학교의 경우 자동차반은 운동장에서 차를 운전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 부기반의 경우 이론 수업은 교실에서 하고, 실습은 회령시에 있는 각 기업소에 가서 방학동안 1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한다. 그러나 양성소의 경우도 장비나 기계가 낡아서 고장이 자주 나거나, 기종이 부족하여 충분한 실습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기능공학교의 책상과 절상은 나무에 못을 박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하고, 그나마 수량

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육생이 사용하는 교재도 사회부문의 혁명역사 등은 여유분이 있어 남아돌고, 기술 등 전공 부문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졸업할 때 반납을 하여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낡고 찢어진 책들이 많다. 연필·볼펜·노트 등은 중국 물건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직업 기술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등 모든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진행되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 교육훈련 교·강사 수준 및 실태

공장·농장·어장대학의 교원자격은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기사자격을 취득하여 현장 실무경험이 많고, 자격 급수가 높은 사람이 교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으로 교원들도 학교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는 등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능공학교의 교원을 보면, 교과목 중 당 정책이나 혁명 및 교시 등을 가르치는 교원은 대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이 되고, 실습 교원은 실무 경력이 많고 급수가 높아야 교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교원은 자기가 맡은 과목에 대하여 기능공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현장 경

험이 약 20년 이상 된 7급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교원을 한다고 한다. 일단 교원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교원의 생활고가 가중되어 교원들도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 교육보다는 비리와 부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양성소의 경우도 당 정책이나 혁명 및 교시 등의 이론을 가르치는 교원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실기 교원은 급수가 높고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자동차양성소는 자동차 운전 15년 이상이고, 면허급수가 2급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 교원이 선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수준은 교육에 적절한 수준이지만, 실제로 이들도 교육보다 생활고에 따른 부업과 비리에 연계되어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교원의 수준은 적합하지만, 경제난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교육훈련 교과목

공장대학의 교과목은 혁명력사, 로작(김일성정책연설), 주체철학, 김일성주의 기본, 정치경제학, 수학, 영어, 물리, 기하, 제도, 기계, 컴퓨터, 전기, 채광설비, 선광설비, 발파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교과목은 각 급 학교의 성격에 따라 실습교과목은 다르게 편성되고 있다. 이들 학교의 교과목을 보면, 사상교육을 강조하는 과목과

내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농업대학이나 어장대학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능공학교는 과나 반별로 전공과목을 공부한다. 부산광산기능공학교 굴착기과외의 경우, 굴착기에 대한 전기·기술적 특성과 운전조작법 등을 배운다. 립업기능공학교 부기반외의 경우 혁명1·혁명2·정치경제학·재정부기·계산기술 등의 과목이 있다. 자동차반외의 경우, 자동차운전·차수리·혁명1·혁명2 등의 과목이 있다. 이들 학교도 역시 사상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성소의 경우 간호원양성소나 교양원양성소 등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기술에 필요한 과목을 가르친다. 물론 혁명이나 당 정책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학교 역시 기술교육과 함께 당의 사상 등 정치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개선 및 지원·협력에 대한 시사점

전체적으로 우선 시급 개선할 과제는 이들 학교의 시설과 장비 및 교원 처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의 시설 및 장비가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설 장비가 지원된다면, 직업기술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실질적인 직업능력이 향상되고, 이들을 산업현

장에서 활용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설비 등을 지원해서 제대로 배우게 하고, 졸업하면 그만큼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지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수당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남한의 높은 수준의 교재를 지원하는 것이 기술교육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시설과 장비 및 교재 등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해서 지원받는 것도 상당히 신중히 응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종이·교재·필기구 등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공학교나 양성소의 경우, 컴퓨터·교재·장비·기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에서 중고로 폐기되는 기계나 컴퓨터라도 북한에서는 좋은 측에 속한다고 한다. 한편 교사의 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교원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 생활이 어려운데 교육이 잘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들에게 쌀과 옷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 교원들의 학력은 걱정하지만, 실질적인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기계나 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교원들의 기술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에도 역시 공책·필기구·종이 등도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화장실·냉난방·식생활등의 지원은 물론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와 전기공급도 필요하다.

IV. 개선 과제와 협력 방안

사실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개선 과제는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 근로자들의 작업 몰입도나 근무 태도 등은 우리에게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시장경제 논리나 경쟁 등에 대한 인식 등이 사회주의적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강일규, 2008). 이러한 여러 요인 중에서 본문은 앞에서 논의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적 기저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와 우리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정책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직업교육훈련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의 특성인 평등의 개념과 노동력 동원을 통한 활용 강조,

그리고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진로 제시 등,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정책은 자체의 경제발전이나 남북한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오랜 분단과 북한 체제의 폐쇄성은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조를 막고 있으며, 북한지역 경제 회복과 경제에서 인력의 공급 및 활용에 많은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북한 근로자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근로의식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북한은 직업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북한 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주요 개선 과제는 첫째, 직업교육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진입 이전에 충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에서 가능한 정치사상 교육 대신 직업의식 및 작업몰입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서 지역의 실정과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설립하고,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개방과 점진적인 정책과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평등과 집단주의의 지양이 필요하다.

2. 근로자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북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지적되는 근로자의 문제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거나, 근로의식의 결여, 기계 및 기술에 대한 지식의 결여, 산출 상품에 대한 질 관리의 문제, 기술교육훈련과 관련한 용어 이해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첫째,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직업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중에 직업의식 및 작업몰입과 상품에 대한 질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현장 용어나 관습 등에 대한 교육·학습을 통하여 인력 활용의 적시성·적지성 제고가 필요하다.

3. 교육훈련 방법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현재 북한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방법상에서 교육훈련 기관의 설립과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 내부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원·학생·장소 및 교육방법과 기관 운영 등에

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북한 자체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우리 정부나 기업 및 관련 단체, 혹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당국의 협조와 개선 의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은 대부분 북한진출 기업이나 개성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IT관련 인력은 간헐적으로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한편 교육훈련 대상은 북한 당국이 선발·공급하는 인력에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북한 당국이 제안하는 제한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훈련의 방법(주체, 대상, 장소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 교육훈련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훈련 내용은 정치적·사상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제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의식 개선교육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근로자의 생산성

이 떨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업몰입도 및 근로의식의 저하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향상·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남한 측의 직접적인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를 설득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북한의 교육훈련 담당자가 그들의 실정에 맞게 개선·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러한 방안의 추진은 점진적·단계적인 계획의 수립·추진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진출 기업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정치적 측면의 남북한 간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우선 민간부문에서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협조하는 것이 개선이나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나 관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단체나 종교단체, 혹은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의식과 작업몰입, 나아가서 시장경제체제의 특성 등을 인식시키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은 북한 인적자원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의 추진은 첫째, 인력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설정이다.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개선에서 시급히 필요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설정한다. 인력양성 부문을 결정할 경우 남북한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동시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훈련의 효과성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 둘째, 인력개발이 필요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은 남북한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훈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지원과 협력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호 실현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 셋째, 인력개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계획은 각각 교육훈련의 특성에 맞는 목적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교육훈련의 대상, 교육훈련 대상의 선발 기준,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의 분류, 교육훈련 기간 및 내용(기본교육훈련 과정, 일반

기능교육훈련 과정, 전문교육훈련 과정, 자격인증 과정, 재교육훈련 과정 등으로 분류하여 설정), 교육훈련의 교과 편성, 평가기준, 교육훈련의 장소 및 운영 방침,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및 설비·기자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5. 교육훈련 기자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관련한 시설과 기자재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훈련 기자재는 시설과 함께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이 분야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남한은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일반 정규학교(전문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 및 대학원, 부설 교육원 등)와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및 각종 학원 등이 있으며, 북한에는 일반대학·공장대학·농장대학·어장대학·기술학교 등이 있어 이들 기관 간 교류 및 협력과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예컨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야 된다. 실제로 컴퓨터 분야가 좋은 예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교육 실시와 시설·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북한에 들여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선행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상당부분 존재한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 측이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중 전자 산업은 북한에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교육훈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나중에 합영사업을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 교육훈련 지원은 당장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선 성장 추세에 있는 북한의 경공업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공업 중에서도 섬유산업이 앞서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면 남북한 모두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고, 지원의 효과도 단기간에 가시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 분야는 민간기업들의 대북진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협조와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 반면에 컴퓨터 등과 관련한 첨단산업은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법·제도적인 현실적 제약 때문에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런 첨단 분야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북한 근로자의 하청기술·기능자 전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 론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산업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산업발전은 적절한 인력양성과 공급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인력양성과 활용은 북한 당국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적 기저가 큰 영향을 미치고, 개발·양성 현장의 인프라는 바로 양질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적 기저와 현장의 인프라는 새로운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남북 관계는 기존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에서 새로운 관계설정과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외 사정은 남북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남북한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필요한데, 인적자원개발을 위

한 직업교육훈련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경제개발 등에서 북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관련 기자재나 교원 등 모든 요인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의 경제력과 기존의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이는 외부의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의 지원·협력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요인별·단계별·대상별·지역별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지원의 수준과 분야가 이제는 초기의 그것과 같을 수 없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지원의 목표와 방법 및 지원체계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즉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지역의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일규, 남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_____,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통일경제 역류호, 2008.
- _____, 북한 인적자원개발 지원·협력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1990.
- 김면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에 대하여,” 성인교육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6.
- 김면희,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에서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성인교육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6.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임태, 진로와 직업, 하나원, 2007.
- _____, 통일교육 자료 공모 발표자료, 통일부, 2008.
- 리중찬, “통신 및 야간교육과 재교육사업에 대하여,” 성인교육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6.
- 이종석 편, 북한의 근로단체 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1994.
- 전용선, 북한사회주의 교육이론 연구, 서울: 한누리, 1993.
- 중앙일보, 2007. 10. 8.
- [http://laborsta.ilo.org/\(BAPEP-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1980-2020\)](http://laborsta.ilo.org/(BAPEP-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1980-2020)), 통계청 KOSIS.